

靑 “인천공항 정규직 논란 가짜뉴스 때문”

역차별 논란 확산에 공식 언급...“본질은 사회적 불평등 개선” 문제인 정부, 3년간 19만명 정규직 전환...민간부문 확대 목표

청와대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또 “이번 논란 과정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며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더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국공 보안 요원 정규직 전환으로 촉발된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 두 차례에 걸쳐서 대응에 나섰다. 여전히 청년층 중심으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청와대가 공식 언급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보안검색요원을 저처하는 사람이 5000만원 연봉을 받게 됐다”는 글을 올리고 일부 언론이 검증없이 ‘로보 채용’이라고 보도했다”며 “이후 언론의 팩트체크로 가짜뉴스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인국공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 문제가 부각된 데 대해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 중 상당수는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다”며 “가짜뉴스로 드러났지만 (보안검색 협력업체 초임 임금은) 5000만원이 아니라 3800만원 연봉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본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다”면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일인데, 일각에서 불공정

의 문제를 제기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국공과 다른 기업과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인국공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에서만 19만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는 다만 “이번 논란으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

다”며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의 이슈는 혁신과 연결돼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공정과 혁신은 동전의 양면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정을 위해서라도 한국판 뉴딜이나 혁신 정책에 힘을 더 기울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협치합시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의정실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위원회 추천권 여야 1대1로”

민주, 양당제 21대 정치지형 반영 여야몫 변경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 20석 이상의 원내교섭단체가 줄어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비롯해 정부 관련 위원회에 배정된 여야 교섭단체 추천 몫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교섭단체는 과거 민주,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등 3개에서 민주, 통합 2개로 줄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20대의 경우 교섭단체가 여당 1곳, 야당 2곳이어서 야당이 2명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제는 양당제에 맞게 각급 위원회 추천권을 다시 배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임기가 종료되는 방송통신위 상임위원 선정 과정에서 이러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5명으로, 이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이 추천했다. 정당 추천 가운데 허욱(민주당 추천)·표철수(국민의당 추천) 상임위원이 다음달 임기가 종료된다.

민주당은 허 상임위원 후임을 선정하

기 위해 공모를 지난 23일 공지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표 상임위원 후임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통합당의 경우 총선 이전인 지난 3월 지당 몫으로 안행환 전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이미 추천했다는 점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표 위원 후임은 현행대로 내주더라도 여야 상임위원 비율이 1대 2로 고정되는 것은 현재의 양당제 상으로는 맞지 않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당 관계자는 “교섭단체가 2개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의석 구조를 반영해서 여야 교섭단체가 번갈아 추천하는 방식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배분 방식도 추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법상 7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정당 추천 위원은 여야 각 2명씩 총 4명이다. 야당 몫을 2명으로 한 것은 복수의 야당 교섭단체를 염두에 둔 것인데 현재는 야당 교섭단체가 통합당 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통합당, 정강정책에 5·18 포함 보류

특위서 의견 분분...구체적 문구 다음달 결정

미래통합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새 정강·정책에 포함할지에 대한 결정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내부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선 탓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인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날 “큰 틀에서 ‘민주화운동’을 넣는다는 합의는 도출됐고, 문구 조정은 마지막에

할 예정”이라며 “구성원의 동의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민심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종민 비상대책위원장도 5·18 민주화운동을 정강·정책에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

대표와 임기 분리...뜨거워지는 민주 최고위원 경선

노웅래·김종민·진선미 저울질...광주·전남 서삼석·양향자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분리 방안을 추진하면서 2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최고위원 경쟁이 달아 오르고 있다. 과거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당헌·당규에 따라 차기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면 최고위원의 임기도 함께 중단됐지만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면서 당내 최고위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대권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핵심인 최고위원 경력을 통해 정치적 인지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커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도전 여부에 관심사다. 하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3차 추경 이후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미룬데다 민주당 내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여전히 높아 최고위원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은 다소 늦춰지는

분위기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의 도전이 점쳐지고 있다. 재선의 서 의원은 지난 2년여 동안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아 총선 승리를 이끌어 냈고, 3선 무안 군수를 지내면서 쌓은 전국적인 인맥이 강점이다. 서 의원은 현재 최고위원 도전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지역 내 불필요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개호(담양함평영광광장성) 의원은 사실상 최고위원 도전 의사를 접었다. 애초 이 전 총리의 당 대표 도전에 따라 지역 내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이 의원의 도전이 예상됐지만 최근 불출마로 선회했다. 양향자(서구울) 의원도 출마를 고민하

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민주당에선 내달 초 3차 추경 처리 이후 당권 주자들이 출마 선언과 함께 최고위원 도전자들의 윤곽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진 가운데서는 4선 노웅래 의원의 도전이 유력하다. 재선 그룹에서는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지역구인 김종민 의원이 충청계를 대표해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는 친문(친문재인) 주류 모임인 ‘부앙이모임’ 소속으로, 총선 전부터 출마의사를 밝혀 왔다. 부산 재선 최인호 의원도 출마 권유를 받고 있지만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여성 의원 중에서는 진선미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3선이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내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후보 등록 후 사퇴 금지 선관위 법 개정 추진

후보자 등록 후 사퇴 금지 등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21대에서 재추진된다.

선관위는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 의견 가운데 재추진이 필요한 방안을 선정, 목록에 우선 포함시킬 방침이다. 선관위는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 총 51건의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을 냈고, 이중 33건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막판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표·무효표를 막기 위해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는 사표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다. 예비후보자 제도를 통해서 후보자로 등록하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으므로 유권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선거공약 이행 시 필요한 예산을 계산하도록 하는 비용추계 제도 역시 재추진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조오섭, 지하철 무임승차 국가 지원법 발의

해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광주도 지하철 공사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무임승차 국가 지원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28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의 손실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보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도시철도 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향후 10년내 65세 노인 인구의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이용 인구도 급격히 증가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며 “도시철도 노후시설 투자재원 확보와 노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교통복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직통전화 062)416-6226, 010-6833-1600